

202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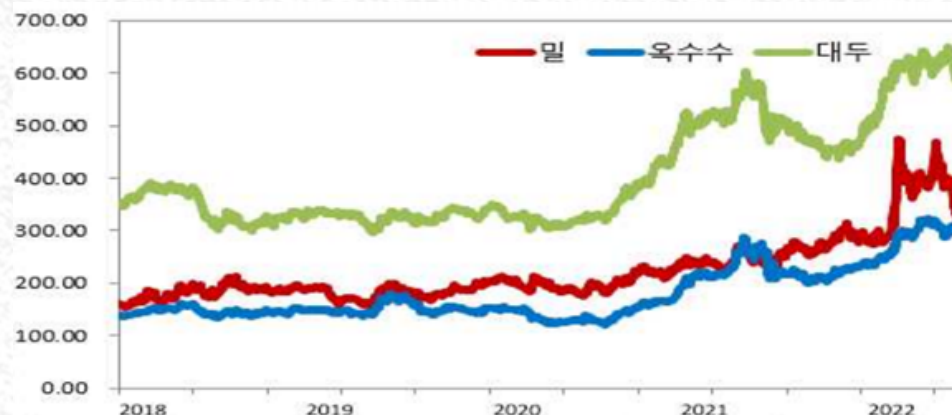
한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7월 3주차 HOT ISSUE

- 하반기 축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돼지 폐사두수 보고 의무화가 돼지 폐사두수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곡물가 정점 지났나... 고생산비는 더 갈 듯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당분간 사료용 곡물 수입가격은 상승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 곡물 시세(시카고선물거래소)는 밀 376달러, 옥수수 299달러로 전달보다 10%, 4% 하락했다. 밀과 옥수수 역시 각각 291달러, 293달러로 전달 평균에 비해 더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2월말(28일 기준 밀 341달러, 옥수수 275달러, 대두 604달러)과 비교하면 옥수수를 제외하고 밀과 대두는 모두 지금이 더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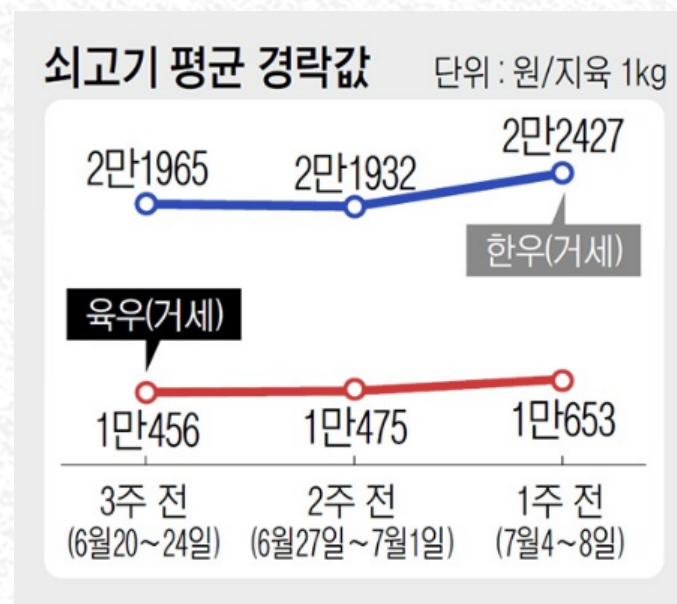
그동안 치솟기만 하던 국제 곡물 가격이 최근 이처럼 하락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같은 이유로 국제 유가도 급락했는데 이에 세계적인 물가 상승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하락한다면 양돈농가들로서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고곡물가 터널 안이다. 지난해 평균(밀 258달러, 옥수수 225달러, 대두 501달러)은 물론 코로나 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의 상승분도 아직 다 털어내지 못한 상태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산지의 기상 문제 등 가장 중요한 곡물 공급 쪽 불안은 여전히 전하다.



하반기 축산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 축산물 온라인 경매=비대면 거래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21년 시범 도매시장(농협나주공판장)을 선정하고 거래 시스템을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시스템 시범 운용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온라인으로 축산물 영상, 등급 등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자가 온라인에서 경매에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7월부터 본격 도입(돼지 우선 추진)되며 시범 도매시장도 확대(3개소)하고 부분육 경매를 활성화해 정책효과를 높여나간다는 예정이다.
- 모돈이력제 시행=지난달 9일부터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가 시범 시행되기 시작했다. 농장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사육현황의 정확도를 높여 수급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동·출하·폐사 시 신고해야 한다. 종돈장 전체와 모돈을 개체별로 전산관리하는 농장을 중심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축분 액비 내 질소 기준 개선=가축분뇨 액비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을 삭제한다. 액비 생산 및 이용 여건이 변화해 액비 내 질소 함량 기준이 불필요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 현행 질소 함량 0.1% 이상이면서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이던 기준을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 0.3% 이상으로 개선한다.

축산물 출하정보<소> (7월4일~7월8일) 1++ 등급 소비늘어 값 상승



한우 경락값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1++ 등급 중심으로 소비가 크게 늘며 가격 상승을 견인한 데다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회 등 날음식을 한우고기로 대체하려는 소비가 늘어서다.

한우는 전국 도매시장에서 전주 대비 14.58% 많은 8497마리가 경매됐다. 한우 거세우 평균 경락값은 지육 1kg당 2만2427원으로 전주 대비 495원 상승했다. 1++A 등급은 25원 오른 1kg당 2만7042원, 1++B 등급은 94원 내린 2만5457원이었다. 육우 거세우는 전주 대비 7.63% 적은 617마리가 거래됐으며 1kg당 평균 경락값은 178원 오른 1만6653원이었다.



정부, 수입 쇠고기 연말까지 무관세 ‘만지작’... 한우농가 불났다

기획재정부가 외국산 쇠고기에 대해 0% 할당관세 적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우농가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주요 경제지들은 잇따라 기획재정부가 물가안정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에 이어 쇠고기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0%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내놨다. 국내 쇠고기 소비시장에서 점유율 65%를 차지하는 미국·호주·뉴질랜드·캐나다산 쇠고기 가격이 전년 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란 게 경제지들의 설명이다. 해당 쇠고기 수출국에 적용되고 있는 관세는 10.7~18.7%인데, 이를 무관세로 적용해 쇠고기 가격을 낮추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나 수입 쇠고기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우농가들은 이러한 해명에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 해명을 보더라도 쇠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건 사실로 보이며, 아직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여전히 해당 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국한우협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수입 쇠고기 무관세조치를 정부가 강행한다면 전국 9만 한우농가는 모두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애물단지 전략한 젖소 수송아지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

농협 축산정보센터에 따르면 육우 초유떼기 산지가격은 올해 1월만 하더라도 두당 39만8천원이었으나,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6월엔 15만1천원으로 급락했다. 분유떼기도 마찬가지로, 동기간 85만원에서 54만2천원으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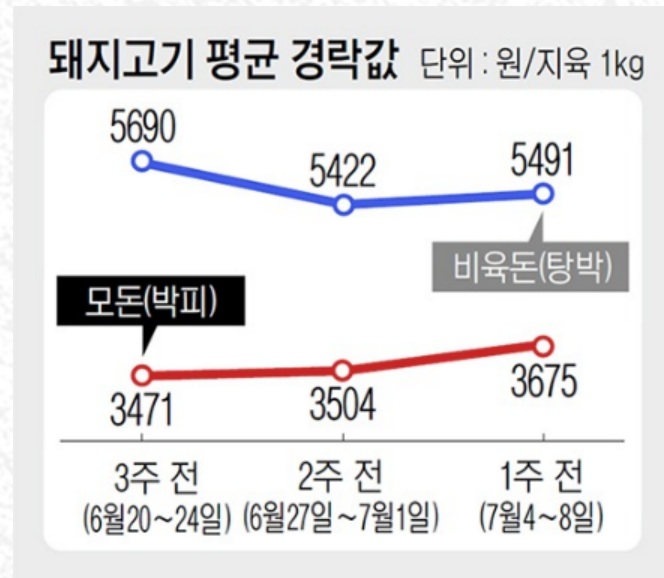
경기 안성의 한 농가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초유떼기의 경우 시세가 5만원 밑으로 가격을 불러야 가져갈 지경이다. 분유떼기도 45~5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지역에선 4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만큼 송아지를 내놔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송아지 가격이 바닥을 치게 된 요인으로는 사료가격 폭등이 꼽히고 있다. 지난해부터 상승을 거듭하고 있는 사료가격이 올해도 그 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8월에도 인상이 예고돼 있어, 경영부담에 입식을 주저하고 있다.

또 다른 농가는 “사료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 조기출하를 하거나 비싼 사료를 더 먹여서 등급을 올려도 적자로 돌아오고 있다” 성토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적용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다.

축산물 출하정보<돼지> (7월4일~7월8일) 휴가철 맞아 강세장 지속



돼지 경락값은 출하량 감소에 따라 약간 상승했다. 당분간 폭염으로 돼지 비육 속도가 더뎠어 공급량이 줄고 여름 휴가철 야외 소비가 증가해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는 지난주 전국 도매시장(탕박 기준, 제주 제외)에서 전주 대비 3.71% 감소한 7804마리가 경매됐다. 지육 1kg당 평균 경락값은 5491원으로 전주 대비 69원 상승했다. 모돈(박피) 1kg당 평균 가격은 171원 오른 3675원이었다.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 국내 양돈농가 ‘속앓이’

7월부터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무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국내 양돈농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물가당국은 연일 상승하는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고자 이달부터 외국산 돼지고기 5만t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수입해 국내 공급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대형마트들은 당장 이달초 일제히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목심을 20~40% 할인판매에 나서며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췄다. 지난 주말 동안 한 대형마트에선 자사 멤버십 적립을 조건으로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목심을 각각 100g당 1366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이는 6월 평균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소비자가격(100g당 2912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게 물가당국의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양돈농가들은 “돼지고기값이 오른 건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인데 우리를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면 억울하다”며 항변하고 있다.

[6월 한돈 리뷰] 향후 시장 가시밭길 예고?

구분/단위	월/누적	6월	전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전월	증감	전년 동기	증감
소비자심리지수(CCSI)		96.4	102.6	(6.2)	110.3	(13.9)
한돈 재고 동향(5월 기준)	전월 대비	-7.7%	전년 대비	-57.7%		
국내 냉장 삼겹살(원/100g, 중품)	월	2,912	2,802	3.9%	2,543	14.5%
수입 냉장 삼겹살(원/100g, 중품)	월	1,456	1,422	2.4%	1,316	10.7%
등급판정두수 (만 두)	월	144	153	-5.5%	145	-0.3%
	누적	927			914	1.4%
수입육 (톤)	월	35,172	39,931	-11.9%	32,503	8.2%
	누적	236,560			162,689	45.4%
평균 도매가격 (원/kg, 제주 및 등의 제외)	월	5,861	6,385	-8.2%	5,204	12.6%
	누적	4,978			4,298	15.8%

6월 한돈 시세가 꺾였다. 특히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나름 선전해온 한돈 시장이 하락 · 약세 국면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지, 불안한 흐름도 나타났다.

최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상반기 평균 돼짓값은 4천978원으로 1년 전(4,298원)보다 15.8%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2분기는 5,831원으로 1분기(4,270원)보다 무려 36.6%, 지난해 동기간(4,936원) 대비 18% 올랐다. 그런데 6월 한돈 출하물량이나 돼지고기 수입량 모두 전년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불안한 내림세다.

불안을 더 강화하는 변화 중 하나는 4월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가정 소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조짐들이다. 여기서 정부가 돼지고기 5만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하면서 한돈 시장의 입지는 더 위축될 여지가 높아졌다는 점도 그렇다. 더구나 가공용 부위 외에도 한돈과 직접 경쟁하는 냉장 구이용 부위가 7월부터 들어오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이 수입 냉장 삼겹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위축된 가정 소비 시장에서 한돈 입지를 더 축소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8대 방역 시설이 전국 양돈장으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양돈장들은 올 연말까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 기준을 전국 모든 양돈농가에 적용, 이 시설을 6개월 내(12월31일 까지)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한돈협회의 의견을 반영 8대 방역 시설 중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한 경우에는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도 18개월내 설치로 유예됐다.

농축산부는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는 650억원으로 농가 최대 5천만원(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한도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8대 방역시설을 조기에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 및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도 부여하여 농가의 신속한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돼지 폐사두수 보고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

○ 축주 : (농장명 :)
주소 : (연락처 :)

일시	축사별	구분	사육두수	폐사두수	폐사축 처리방법	작성자

조만간 양돈농가에서 돼지 폐사두수와 이의 처리방법에 대해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의무화될 듯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 문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농가가 일자별로 돼지의 폐사두수와 폐사축처리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는 매달 정기적으로 해당 문서를 시군구 지자체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돈이 폐사하거나 폐사율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폐사축 처리 방법에 있어서도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방법 외에는 허용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현행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퇴비사를 통한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폐사두수 및 폐사축처리 기록 대장'은 현재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육 돼지에서의 ASF 상황과 최근 폐기물(폐사체) 보관시설 등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조치로 추정됩니다

계란 유통동향(6.29~7.5, 축산물품질평가원)

구분	산지가격	도매가격	소비자가격
	특란(원/30구)	특란(원/30구)	특란(원/30구)
7/5(화)	5,090 ▲1	5,590 ▲20	6,791
7/4(월)	5,089 ▲9	5,570 ▲4	6,791 ▼11
7/1(금)	5,080 ▼32	5,566 ▼26	6,802 ▼4
6/30(목)	5,112 ▼39	5,592 ▼82	6,806 ▼19
6/29(수)	5,151 ▼26	5,674 ▲24	6,825 ▼8

축산물 출하정보<계란> (6월29일~7월5일) 주간 계란 수급정보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에 따르면 지난주 지역별로 계란 수급상황이 원활 8곳, 보합 4곳, 체화 2곳이 나올 정도로 혼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공급의 과다에 의한 가격하락을 우려했던 것이 상황이 서서히 현실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 일부 농가에서 무더운 날씨로 인해 생산성이 하락하는 등 사육수수대비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지는 않아 급격히 시세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는 일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한 난중 하락과 생산율 하락에 더 이상 의존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농가들은 자승자박의 우려를 범하질 말기를 바란다. 농가들에 입식보다는 일정에 맞는 도태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 닭고기 수급조절 계획, 업계 피해 우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와 관련해 닭고기업계의 비판이 거세다.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치솟은 상황에서 가격(산지시세)만을 통제하는 것은 업계의 손해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6일 ‘제1차 닭고기 수급조절협의회’를 열고, 이날 협의회서 이달부터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병아리 입식물량을 2~3% 늘려 닭고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료구매자금 지원예산 확대 및 금리인하를 통해 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관련 업계서는 이같은 수급조절 방식은 당장 닭고기 가격을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결국 육계업계 전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도 “정부가 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해 준다는데, 육계농가들은 대부분이 계약사육을 하고 있어 지원대상 농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이를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것을 지원대책이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식중독의 원인은 양계산물이 아니다

식중독 원인이 계란 등 양계산물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여름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김해시를 시작으로 집단 식중독에 대한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 경남 김해의 유명 냉면집 음식을 먹은 34명이 식중독에 걸려 이 중 한 명이 사망한 데 이어, 경남도가 운영하는 대학생 기숙사 식당을 이용한 학생 여럿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 정부는 식중독 경보 4단계 중 3단계 수 위인 '경고'를 발령했다. 특히 사망까지 이르게한 원인이 살모넬라균에 의한 염증인 것으로 밝혀지며 계란이 또 다시 감염의 매개 식품이라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란 내외부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확률은 아주 희박하다. 더욱이 지단이나 삶은 계란으로 조리할 경우 혹여 살모넬라균이 있더라도 이를 사멸시 키는데 충분한 열이 가해지기 때문. 조리가 끝난 지단이나 삶은 계란의 표면에 적절치 못한 보관환경으로 이차 오염이 발생, 살모넬라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설명이다.

살모넬라균은 25~35℃에서 가장 잘 생장하고 10℃이하 일 경우 거의 생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냉장보관과 조리도구를 75℃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는 등 조리시 철저한 관리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이다.